

시론

100년을 훌쩍 넘는 ‘빛고을 광주’ 지역경제의 길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드디어 이재명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의 한국은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했지만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경제 쇠락으로 국운 쇠퇴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과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비수도권을 배려하고는 있지만 지방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빛고을 광주’는 백제시대 무진군(武珍郡), 통일신라시대 무주(武州), 무진주(武珍州)로 고려 태조 23년(940) 광주(光州)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했고 조선시대 광주군에서 1896년 13도 재편으로 전남의 도청소재지가 됐다. 일제 강점기 1931년 광주읍, 1935년 광주부로 승격되면서 인구는 5만4천607명이었다. 해방 이후 1949년 광주시 개칭,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1995년 광역시로 개칭됐고 그해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빛고을’ 이미지가 탄생했다. 인구는 해방 당시 8만3천명에서 2014년 147만6천 명을 정점으로 2025년 139만9천명이 돼 140만명 대가 무너졌다.

광주의 근대 여명은 대한제국 시대에 미국 선교사들이 1904년 양립리교회 설립과 1905년 광주제중병원 개원, 1908년 수피아여학교 설립 등 서양문물이 들어오는 시기일 것

이다. 광주는 일제식민지 수탈 수단으로 1914년 호남선 개통과 함께 한인 상인 등장과 근대 민족자본이 형성되면서 일본의 총장로 1~3가 상권 장악과 수탈 경제가 본격화된 1930년대 실질적 근대화의 모습을 갖추었다. 1917년 일본인 기타무라 유이치로(北村友一郎)는 “당시 광주시내는 율통불통한 흠타미가 즐비했고 벋짚지붕을 엮은 집으로 … 누문과 성벽 철거로 넓은 도로를 동서로 내고 초가집이 사라지고 기와나 양철 지붕을 엮은 일본식 가옥이 들어서 본정통에는 일본인 점포가 즐비했다.”라고 식민통치의 시각에서 광주읍성 일대의 풍경을 묘사했다.

해방 후 전시경제체제(1950~60년대)에서 광주공업단지(광천·유덕·상무·농성동 일대 80만평) 조성, 1968년 총장로 5가 광주는 행 영업 시작, 1969년 아시아자동차 공장 기공식과 1970년 3월 피아트 브랜드가 출하됐다. 그러나 개발 소외로 호남을 떠난 사람들이 356.9만 명(1970~1997년)이었고, 1969년 이전과 97년 이후까지 합하면 1천200만 명(타 지역 이동 후 태어난 가족 포함)으로 추정된다. 광주는 1976년부터 제1단계와 2단계 ‘광주권 생산도시화운동’이 시작돼 최초로 본촌·속암산업단지가 1979년 착공해 1983년 준공됐고 1990년대 평동산업단지와 최초 국가산업단지로 첨단단지가 조성돼 본격적인 산업화의 대열에 동참했다. 광주는 1997년 IMF 금융위기로 기아차의 현대차 편입, 대우가전의 합병, 향토백화점의 몰락, 해대 타이거즈에서 기아 타이거즈로 탈바꿈, 광주는 행의 공적자금 투입 등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2000년 이후 서남권 중핵도시와 산업고도화 기반 조성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

시 건설, KTX와 광주지하철 개통,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2020~현재)를 맞이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설립,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으로 미래 산업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현실은 암울하다. 2023년 기준 명목 지역내 총생산(GRDP)은 수도권 경기(694조원), 서울(648조원)이 전국 총생산(2천404조원)의 52.3%를 차지한 반면에 광주는 52조원으로 2.1%에 불과하고 최하위권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3년 3천545만원으로 전국 4천649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3천98만원), 부산(3천476만원) 순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이며 울산(8천124만원)에 비해 229배의 차이를 보인다. 기업은 1천대 기업 중 2012년 12개에서 23년 9개로 감소했다. 이런 쇠락을 걷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는 마·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대기업 자동차 공장의 해외 투자와 가전 및 자동차 조립 라인마저도 해외 이전을 걱정할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의 광주는 미래 산업으로 AI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산업(AI 컴퓨팅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 AI와 RE 100기반의 미래차 산업(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분산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 양자 및 휴머노이드 테크산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지역민들은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과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울산·광주·강원 공동추진) 등 새 정부의 지역공약이 조속하게 실행돼 광주 미래 산업의 활로가 열리길 기대해 기다린다.

취재수첩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목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 위촉을 두고 마을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마을에서는 그동안 관례대로 마을에서 선출한 통장 후보자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촉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를 따르지 않고 공모 절차를 거쳐 다른 사람을 위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전 통장과 마을운영위원회 명의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통장이 위촉한 통장에 대한 불신인 건을 주민 80여명이 서명한 확인서까지 첨부해 제출했지만, 목포시는 통장 위촉은 통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유권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은 1987년 1월1일자로 무안군에서 목포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자연부락이 유지되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운영위원회는 마을 규약에 따라 대소사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마을 총회에 회부해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며, 통

장 선출도 마찬가지다. 이번 통장의 경우도 지난 6월5일 마을 임시총회를 거쳐 통장 후보자를 선출했고, 마을 회의록을 첨부해 공모에 접수했다. 하지만 마을에서 선출한 통장 후보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으로 선발되지 못했다. 목포시는 시행규칙에 따라 통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2명의 후보자 중 면접심사를 거쳐 6점 이상을 받은 최고 득점자를 선발했다며, 제출된 불신임안은 위촉한 통장의 해촉 사유가 될 수 없고 통장 위촉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위임한 권한은 위임받은 자가 공평하고 타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형식적 권한일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4년이 지났음에도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는 시행규칙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은 주민의 책임이 아니다.

목포시는 그간 이를 마련하지 못해 놓고 고유권한만을 앞세우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목포시의 규칙은 통장 위촉과 관련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마을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논란의 소지가 많은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통장 위촉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많았음에도, 객관적인 기준 마련보다는 불만과 여론을 무마하는 데 그쳐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통·반장의 위·해촉)에는 통·반장을 공개모집을 거쳐 통장이 위촉하고 공고 후 통장이 인정하는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심사위원은 통장과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있다. 이처럼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인근 무안군의 경우 마을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주시도 이와 유사하게, 임명권자의 권한이 형식적으로만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

갈등이 생기면 해결해야 한다. 갈등은 단순히 대화만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다. 양보와 배려가 전제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에서 행정이 왜 ‘행정’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대목이다.

권한만 앞세우기보다는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노소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노소 사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수연·장충형철서>

‘노소’ 기승…이중 사기 주의보



최근 유행하는 범죄 수법인 ‘노소’는 약속이나 예약을 한 사람이 별다른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노소 사기는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이뤄진다. 사기범은 먼저 특정 단체나 기관, 또는 유명인을 사칭해 단체 예약을 요청한다. 또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며 지정된 판매처 연락처를 안내한다.

자영업자가 해당 번호로 연락을 취하면 또 다른 사기범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명함을 제시하며 물품 대금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이를 믿고 송금하면 연락이 끊기고 예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즉 판매처와 노소 사기범이 공모해 자영업자를 속이는 ‘이중 사기’ 구조가 특징이다. 노소 사기는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예약 준비에 소요된 인력·비용 손실은 물론 수백만원에 이르는 대리구매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경쟁 업체 방해, 무료 혜택 악용, 유명인 사칭 등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8일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시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핵심 정책 추진 방향 보고회’를 열고 국수분 수사본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전시행정 우려되는 광주 남구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

광주 남구가 사직동 일대를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역점 추진중인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가 곱돌고 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물 리모델링을 마쳤으나 운영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살롱은 준공 6개월이 지난 뒤에 모집 절차에 들어갔고 아날로그사진관과 수장고·기념품판매장, 갤러리살롱은 위탁자 공모가 이뤄지지 않아 개관 시점이 불투명하다. 육성상화는 설계 용역을 마친 뒤 2026년 3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테마형 문화 공간으로 살롱이 모습만 드러냈을 뿐이다. 남구는 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 일정을 내부 검토를 거쳐 유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구한다고 해도 내부 시설 정비 등으로 공식 오픈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린다.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주민과의 약속이 차일피일 미루지고 있다.

기획 의도는 훌륭하다. 살롱 드 사직은 시간우체국을 중심으로 도보로 10분 이내 장소에 6가지 종류의 살롱을 마련, 체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RE100 산단 거점 무안반도 통합론 예의주시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의 통합은 지난 30년 동안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인구감소와 경제 위축으로 지방 소멸로 치닫는 전남 서남권을 살리는 당위성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RE100 전용 산업단지 건설을 국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다시 군벌을 지켰다.

목포는 해상풍력사업의 중심 배후도시로, 서남권은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그리고 미래 신성장 사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부각했다.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거점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한 넓은 마음으로 통합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남지역은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이 묶이고,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합치는 등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비슷한 시기 출발한 무안반도만 계속 실패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청년층 이탈과 고령화 가속으로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인구 3

사직맨션 부근 통기타&국악살롱은 음악적 요소를 특화했으며 마을 축제, 주민 쉼터 등 다용도로 쓰인다. 시간우체국 맞은 편 아날로그사진관은 옛 추억을 되살린 기존의 건물이면서 내부를 최첨단 디지털 장비로 구성했다. 최부자집과 통기타 거리 인근 수장고·기념품판매장은 탐방객이 가족을 위해 작성한 우편물과 사진 등의 물품도 함께 보관해준다. 근대문화 자원인 육성상회는 인문학 공유 공간으로 거듭난다.

성공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제1호 결과물인 통기타&국악살롱은 전통을 활용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테마를 가진 살롱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탁자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비와 시·구비 등 총 45억3천여 만원 규모로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각각의 특성과 활용 목적에 맞춰 모집에 나선 결과로 지연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나 우려가 커졌다.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감당해야 한다.

0만명의 규모 경제를 갖춘 서남권 최대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최우선 국가사업인 RE100 산단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무안반도 통합이 필수 전제가 된다. 지역 발전의 계기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대승적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것이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들어설 민선9기를 즈음해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실천 의지를 보이는 시장·군수를 선출해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일각의 우려대로 흡수되는 게 아니다. 공동 번영을 위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RE100 전문 산업단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역 정치권에서 무안반도 통합에 재차 시동을 걸었다. 자치단체의 권한 자기기에 연연해선 안 된다. 차제에 여수, 순천, 광양시 등 광양만권도 공동화를 재개해야 한다. 전략적 차원에서 당위 및 필요성 확산에 전력해야 한다. 책임있게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비트코인 가격 추이

증가 기준, 1비트코인당

한국시간 7월 14일 장중 12만 달러선 침투파

연합뉴스

자료: 코인베이스, 연합인포맥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4일 사상 최초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2시25분께 24시간 전보다 3.88% 오른 1개당 12만2천443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앞서 지난해 12월 5일 10만달러, 올해 5월 22일 11만달러를 차례로 넘어섰다. 비트코인 가격은 10만달러를 돌파한 뒤 올해 2월까지 10만달러선 안팎에서 횡보했다. 이후 3~4월 7만달러선까지 후퇴하는 약세를 보이다가 재차 상승세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후반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11월 11만8천달러선, 13일 11만9천달러선을 차례로 돌파했다.

최근 일주일간 상승률을 보면 비트코인이 12%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8%, 엑스알피(XRP-리플)는 29%에 달한다.

이러한 급등세는 미국 연방 의회가 ‘가상화폐 3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크립토 워크’(Crypto Wor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